

2020 북극권 신정세 :

북극의 안보적 도전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_유준구



- I. 최근 북극에서의 안보경쟁 심화
- II. 북극거버넌스의 변화:
평화협력에서 안보경쟁의 지역으로?
- III. 북극에서의 미중러 안보 경쟁 심화
- IV.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최근 북극에서는 지역안보에 경종이 수 차례 울리기 시작했다. 20년 이상 북극지역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유리된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지만 최근 군사 경쟁의 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북극은 'High north low tension(저갈등 북극)' 긴장과 갈등보다는 협력이 증시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1987년 무르만스크에서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인 고르바초프의 연설을 통해 북극의 전략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 구축을 촉구한 것은 협력의 북극 즉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서막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설립협정에서 안보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하여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도 북극이사회 회원국 간의 군사안보 문제 배제라는 암묵적인 협의 하에 유지되었다.

북극의 해빙이 불러온 북극의 개방은 북극항로 및 북극의 매장된 막대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북극항로 및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대륙붕 확대, 에너지자원 경쟁 등 새로운 도전을 초래하였다. 즉, 그린란드 빙하는 기후변화로 약화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녹고 있다. 이로 인해 화석연료, 광업 및 어업, 해운 등 경제적 가능성을 가져다준과 동시에 환경위협은 물론 자원확보 경쟁, 군사기지 건설 등 정치안보적 위험도 초래하였다. 북극에서의 안보경쟁은 두 가지 요인으로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선, 북극에서의 전통적인 양대 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하게 재인식하면서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근북극국가(Near Arctic State)'를 표방하고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와 같은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NATO 및 기존 서방 북극권 국가들의 많은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긴밀한 경제적, 전략적 공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등 기존 북극 연안국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외교안보적 대응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의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 비북극권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비북극권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북극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북극은 점점 더 지역적 안보영역을 넘어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조명되고 있다.

I. 최근 북극에서의 안보경쟁 심화

최근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 및 안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몰락 이후 북극 환경보호를 메개로 형성된 다자간 북극 협력체계는 최근 러시아의 신북극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안보전략적 대응 역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북극이사회를 계기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심이 표면화된 바, 2019년 5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은 "북극은 힘과 경쟁의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극에서의 전략적 개입에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즉, 북극이사회를 계기로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심이 표면화되면서 시작된 강대국 간의 북극 경쟁은 최근 '북극 및 남극에서의 국익 보호를 위한 각서(Memorandum)'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각서에서는 2029년까지 무려 총 26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형 쇄빙선을 최소 3척 이상 건조, 미국의 극지방 함대 역량을 강화하고 쇄빙선과 연계한 군사기지를 4곳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북극의 중요한 이유는 ICBM 등 대륙 간 무기의 최단거리로 군사적 요충지대인 바, 핵추진 쇄빙선, 신형핵미사일 등 미·러의 신군비경쟁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이 극지방의 군사 전략을 크게 강화하기로 방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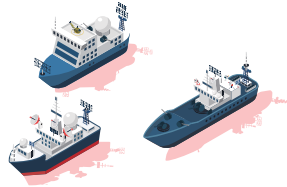
세운 배경에도 러시아의 북극지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바, 러시아 보유 쇄빙선 숫자는 46척으로 미국(5척)보다 9배 이상 많다. 러시아는 또한 2015년부터 북극사령부를 개설하고 북극지역에 15개 대형 군사기지를 설치한 데 이어 배수량 3만톤급의 초대형 핵추진 쇄빙선 등 수십 척의 쇄빙선을 건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쇄빙선단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북극 에너지자원과 북극 항로 기회를 활용한 경제협력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리적 이점을 심분 활용하여 대륙붕 확대, SLOC, 군사기지 건설, 에너지안보 등 북극 지역의 안보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극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2018년 북극정책백서를 통해 근북극국가를 표명하고 BRI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과 북극, 유럽을 잇는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선박용 소형원자로 기술을 이전받아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하였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바탕으로 러시아 북극 가스개발에 최대 투자자로 등극한 후, 러시아 북극항만에 대한 투자,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 캐나다 채굴 기업 티맥(IMAC) 인수 시도 등 중국에서의 '중극몽'을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인 북극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II.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 평화협력에서 안보경쟁의 지역으로?

1. 복합이슈로서의 북극안보

2019년 2월 COECSW(Centre of Excellence for Operation in Confined and Shallow Waters)는 “In from the cold: The end of Arctic Exceptionalism”이란 주제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의 부대행사에서 “지금까지 북극은 예외지역으로서 대결이 아닌 협력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강대국간 경쟁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곧이어 같은 해 5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이슈를 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북극이사회 최초로 각료선언문 채택에 실패하였다. 이는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 구조인 북극이사회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실 냉전 말기부터 국제사회에서 북극은 독특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는데, 1987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에서 묘사된 “평화지대(Zone of peace)”, “소통의 영역(Territory of dialogue)” 혹은 “모자이크 프로젝트(MOSAIC of cooperation)”와 같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북극은 패권적 국제정치와 다소 거리가 있는 독특한 공간이자 협력과 평화공존에 기반한 지역적 거버넌스 체제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기초를 반영하여 1996년 북극이사회 설립협정인 오타와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군사 안보 문제를 배제하고 공통의 북극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을 증진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북극이사회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및 제재 국면에서도 지정학적 이슈와 패권 경쟁과 같은 이슈는 배제하였다. 이렇듯 평화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치·전략적 논의와 일정하게 절연된 ‘북극 예외주의’는 북극 거버넌스를 작동하는 기본원칙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상기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에서 확인된 변화된



인식은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강조한 것으로 다양한 북극 안보의 담론과 더불어 북극 예외주의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물론 냉전기에도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북극에서의 안보 문제가 논의되었다. 다만, 냉전의 종식 직전부터 단순한 군사안보 차원이 아닌 복합안보 차원의 접근이 시작되었는데, 1987년 유명한 무르만스크선언이 일종의 그 번복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극에서의 안보 이슈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는 물론 인간안보, 환경안보, 경제안보 등 개별 이슈 전반에 걸쳐 종합적·융합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개별 안보 영역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 체계 속에서 각각의 이슈 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보는 복합이슈로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해결 역시 단선적이지 않은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북극 체제에서의 안보이슈 역시 안보를 매개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2. 북극에서의 안보 경쟁의 범위와 특성

여전히 북극에서의 협력의 명제는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자 모든 국가행위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의 해빙 등 북극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북극의 개방을 초래하기 시작했고 북극을 둘러싼 협력이 증대되는 것과 동시에 안보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북극에서의 안보 이슈의 등장은 글로벌 안보 환경에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해양 등 글로벌 이슈 전반이 안보화(Securitization)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서 안보 개념 및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 글로벌 이슈가 과거에는, 정치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분절적으로 파악되었는데 최근에는 상기 세 가지 측면을 융합적·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극에서의 안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글로벌 안보 경쟁이 확산되어 북극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즉 미·중·러 글로벌 안보경쟁이 북극에서도 확산·심화되는 문제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북극지역 체제에서 안보 이슈가 부상한다는 문제이다. 즉, 지역 안보 체제에서 ‘북극의 특정’ 이슈 예컨대 해빙에 따른 자원개발과 항로 이용 가능성 증가에 따른 북극 연안국간 주권의 강화와 충돌 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극이 저장도 긴장에서 근원적인 긴장이 내재된 지역으로 변화한다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북극에서의 미·중·러 안보 경쟁 심화

1. 중·러의 공세적 북극 진출

중지하다시피 북극권 국가 가운데, 군사력 진출에 적극적인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2016년부터 북극에 인접한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의 코텔니 및 프란츠요시프제도의 알렉산드라 등 두 도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였다. 또한 북극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위해 DF-10, DF-30 차량에 토르-2DT 지대공 미사일 및 대공방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배치했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의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 시도는 기존 러시아의 북극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활용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의 미개발 가스의 80% 이상과, 전세계 미발굴 석유의 13% 이상이 북극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 북극항로 활용과 맞물려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이 상황에서 자국의 북극 영유권 확대 강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도 러시아는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북극에서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중국이 북극의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 1월 발표된 중국 북극백서에서는 북극에 대한 중국의 장대한 이익이 있으며, 따라서 주요 이해당사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은 북극 연안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북극이 분리·분절된 지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그 근거로 중국은 북극의

기후변화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북극 연안국들만이 북극의 환경, 항행 및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발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백서는 중국과 비북극권 국가도 북극의 조사, 항행, 자원개발, 어업,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 등 일련의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스발바르조약과 UNCLOS의 당사국으로서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북극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중국은 북극을 '공용재(Common good)'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북극 정책에서의 우선순위는 여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와 같이 과학조사,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북극항로 활용 제고인데, 각 우선순위 아젠다의 이면에는 안보적 함의가 있다. 우선 과학조사의 경우 북극 지역의 중국의 과학조사 기지는 중국의 바이두-2 위성 운영의 필수적인 바, 바이두-2 위성 개발 및 확산은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의 근간을 이루며 미국 GPS 의존을 탈피하려는 중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중국의 북극에서의 과학조사 정책 역시 기존 중국의 우주 안보전략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미국의 대응

중·러의 공세적인 북극 진출에 대해서 미국은 외교적·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바,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중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새로운 북극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2016년 이래 미국의 북극전략에서는 중국을 북극이사회의 단순 옵서버 국가로 인식하였으나, 2019년 6월 북극전략에서는 중국을 20회 이상 언급하면서 중국의 북극에서의 행동과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북극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간파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자신을 북극에서의 사실상 주요 이해당사자라고 규정하고 특히, 북극에서의 중·러 경제 및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북극에서의 권력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중국이 북극에서 북극권 국가와 과학조사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면서 점차 투자 및 경제협력 차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미국은 북극권 국가들에게 중국의 북극에서의 전략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접근과 유사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진출은 결코 호혜적일 수 없으며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극에서의 중국의 행동을 “베이징은 중국의 자본, 기업,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중국의 영구적 안보기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물론 미국의 북극에서의 일련의 군사적 대응은 군사적 차원에서 보다 공격적인 러시아의 북극 진출 특히, 북극 군대 창설 및 러시아 연안의 군사기지 재구축이 직접적 요인이다. 새로운 북극전략에 반영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캐나다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NORAD)를 강화하고 NATO와 함께 유럽북극안보 협력을 위한 군사협력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기 유럽 북극안보 협력에 노르웨이, 덴마크, 옵서버 국가인 영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특히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 간 북극안보 네트워크에서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분명히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북극에서의 외교적 공세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미국은 러시아의 경우 가시적이고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반면 중국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도전 요인이자 북극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북극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강화는 향후 정치, 안보에 함의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상쇄하기 위한 일련의 유효책을 러시아에 제공할지 여부도 고민하는 단계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에 대한 공세적인 투자 및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정부 및 민간 전문가를 이들 국가에 파견하고 있다. 가령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2019년 2월 아이슬란드를 방문하여 미국-아이슬란드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곧이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약속하였다. 특히, 중국의 그린란드 공항 인프라 건설 수주 추진과 관련 미국은 덴마크 정부에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필요시 미국도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결국 2019년 중국의 국영기업은 그린란드 입국을 위한 비자 확보 및 거주에 곤란함을 들어 공항 인프라 건설 입찰을 포기하였다.



IV.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 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극에서의 거버넌스 변화와 북극 관련 주요 강대국들 간 안보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북극이 “북극 예외주의의 종말”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안보 이슈가 북극의 전체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물론 양자적인 협력관계에서 있어 서서히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극이사회 및 북극 관련 각종 포럼에서는 과학조사, 환경, 북극항로, 에너지·자원 이슈가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의제이자 안보 이슈로 직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상기 북극 주요 이슈가 안보문제로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는 바, 전체적인 거버넌스 논의 양상이 과학, 정치안보, 경제가 연계·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극이슈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가 ‘안보화’ 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정치 전반에서 자유주의적 다자주의의 후퇴에 따른 국제협력이 약화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화’ 현상은 안보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시사하는데, 과거에는 군사·정치적 경성안보가 주된 안보 이슈였으나 현재는 해양, 환경, 재난, 보건, 경제, 에너지 등 개별 이슈 자체가 안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령, 경제안보, 해양안보, 환경안보, 에너지안보라는 시각을 통해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바, 북극항로의 개발도 SLOC의 확보·경쟁이라는 해양안보적 시각에서 국가 간 경쟁 및 국가이익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대국 특히 미·중·러 간 북극에서의 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은 북극의 정치안보가 글로벌 미·

중경쟁과 연계되어 전개된다는 점을 시사하는바, 이는 중국의 BRI로 대표되는 경제혁신 아젠다 및 강대국을 지향하려는 국가전략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 북극에 영토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극에서의 안보경쟁 강화가 달갑지만은 않은데 그 이유는 주권적 성격의 안보분쟁은 북극권 국가들이 비북극권 국가들을 북극 논의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외교적 대응에 대해 중국은 북극에서 러시아와 경제적, 전략적 안보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러시아를 활용하려는 의도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 역시 이러한 중·러의 북극공조에 대해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상기 북극 안보 경쟁에 두 가지 시사점은 일견 한국의 북극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에 공세적인 북극 진출은 북극권 국가들로 하여금 읍서버 등 여타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 진출 역시 경계할 수 있는바, 북극 이슈 내지 북극 이익은 북극권 국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초기 북극 거버넌스 모델인 북극권 국가 중심의 논의 구조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역시 북극항로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 수산 분야 진출 등 기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북극 기본정책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북극문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력 확대는 한국과



같은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 진출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북극 진출 및 중·러 간 군사 안보적 협력강화는 미국 및 북극권 국가들로 하여금 과거의 패쇄적인 북극 거버넌스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북극은 기본적으로 신북방정책의 무대이자, 국제적 과학 기술협력 및 항로, 에너지, 자원개발 등 경제협력의 터전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극에서의 안보 경쟁이 한국이 추진하는 북극기본정책 및 북극권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한편으로 한국은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극의 북극항로나 에너지 자원 개발 같은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북극권 일부 국가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실 그러한 틈새를 공략한 것이 중국의 전략이었고 북극권 일부 국가들이 현실적 필요로 인해 이를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달리 북극권 국가들에 보다 호혜적으로 북극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북극권 국가들 역시 자국에게 커다란 안보 위협을 주지 않는 한국을 보다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북극 진출 및 북극협력이 북극권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북극 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후변화, 환경보호, 연안국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부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북극 진출과 국제협력 추진 배경에 북극항로 개척 및 에너지·자원 개발 등 경제적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고 북극권 국가들 역시 이러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북극이사회 및 북극위킹그룹/전문가그룹에 참여시 북극의 환경변화가 전세계적 이슈이자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면서 국제사회 및 북극지역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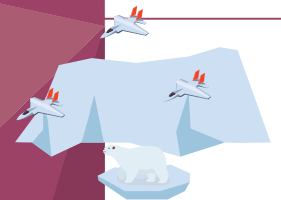
또한 북극의 안보화에 대한 대응의 경우 한국은 북극의 '명화적 발전'이라는 명제를 부각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극 원주민의 삶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차원의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논의되는 안보란 국가중심의 군사적 안보 개념이 아닌 새로운 도전 요인 혹은 '안전(safety)'을 포함한 의미로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가령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해양 환경, 북극항로 등 개별 이슈들이 원주민 삶의 증진 및 안전의 확보라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북극은 물론 글로벌 이슈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 및 북극 관련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도 상기 세 영역에 대한 융합적 논의가 주요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제시하는 북극지역의 인간안보 대응역량 강화라는 명제는 북극의 안보화 논의를 국제협력이라는 기본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극 문제 해결에 호혜적인 파트너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는 말

최근 북극은 더 이상 '북극 예외주의'가 적용되고 국제협력이 우선시되는 공간에서 '신냉전' 혹은 안보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극의 개방이 갖는 이중성에 따른 것으로 즉, 북극해의 해빙이 가져다 주는 인간활동 영역의 확대 및 경제적 기회가 증대되는 상황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 간 군사·경제안보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마중 간 경쟁 심화가 북극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시방의 러시아 경제 체제 확대에 의해 북극에서 중·러의 경제적,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9년 이후 새로운 북극 전략을 수립하고 북극의 군사기지 확충, 핵쇄빙선 건조 등 미국의 북극 군사 역량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북극 연안국 및 NATO와 외교군사적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극에서도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극 이슈가 전반적으로 안보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북극에서의 미국과 중·러의 긴장이 조기에 해소되고 기존 국제협력의 기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극에서의 정치·군사적 경쟁 강화는 기본적으로 비북극권 국가인 한국에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자국을 '근북극국가'로 규정하고 공세적으로 북극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진척 비북극 국가의 북극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존 북극기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극 연안국과의 양자협력을 증진해야 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북극진출은 중국과 달리 보다 호혜적이며 북극 지역사회의 기여한다는 인상을 북극 이해당사자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실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보호, 연안국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한 과학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라는 한국의 북극기본정책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극지연구소 등 기존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연구소 등이 국제정치를 포함한 정책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북극이사회 및 국제포럼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북극의 안보화 담론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제성훈·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 외국 문헌
- Anderson, A. (2009). *After the Ice: Life, Death and Politics in the New Arctic*. New-York: Harper Collins.
 - Aland, K. (2008). Mikhail Gorbachev, the Murmansk Initiative, and the Desecuritization of Interstate Relations in the Arctic.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43. No. 33, 2008),
 - Arctic Council. (1996).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 Ottawa Retrieved from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handle/11374/85>
 - Aland, K. (2008). Mikhail Gorbachev, the Murmansk Initiative, and the Desecuritization of Interstate Relations in the Arctic. *Cooperation and Conflict*, 43(3), 289-311. doi:10.1177/0010836708092838
 - Balzacq, T. (2003). La sécurité: définitions, secteurs et niveaux d'analyse. *Fédéralisme régionalisme*, 4, [online], <https://popups.uliege.be/1374-3864/index.php?id=216>.
 - Battistella, D., Petiteville, F., Smouts, M.-C., & Vennesson, P. (2012). *Dictionna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 approches, concepts, doctrines* (3e éd ed.). Paris: Dalloz.
 - Berkman, P. A., & Young, O. R. (2009).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Change in the Arctic Ocean. *Science*, 324(5925), 339-340. doi:10.1126/science.1173200
 - Borgerson, S. G. (2008). Arctic Meltdown: The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Global Warming. *Foreign Affairs*, 87(2), 63-77.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acces.bibl.ulaval.ca/stable/20032581>
 - Buzan, B., Wæver, O., & Wilde, J. D. (1998). *Security :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CO:Lynne Rienner.
 - Byers, M. (2010). *Who Owns the Arctic?: Understanding Sovereignty Disputes in the North*. Vancouver: Douglas & McIntyre.
 - Byers, M. (2017). Cris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 Arctic case stud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1, No. 4, 2017)
 - CAFF (Cartographer). (2001). The limits of the Arctic according to various definitions. Retrieved from <http://library.arcticportal.org/id/eprint/1378>
 - Center for Peace Studies - UiT (Producer). (2019, May 14). What is Arctic Security [Retrieved from <https://soundcloud.com/user-647153942>
 - COECSW. (2019). The Maritime Dimension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 February 2019. Retrieved from <https://www.coecsw.org/our-work/spotlights/munich-securityconference-2019/>
 - Deng, B. (2016). Arctic security: evolution of Arctic security dynamics and prospect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Arctic. *Advances in Polar Science*, 27(3), 163-169. doi:10.13679/j.advps.2016.3.00163 This is the name of an international forum about Arctic politics held in Russia since 2010. (<https://forumarctica.ru/en/>)
 - Horst, W. J. R., & Webber, M. M.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Vol. 44 No. 2, 1973), pp. 155-169. available at <http://www.jstor.org/stable/4531523> Horst & Webber.
 - Lackenbauer, P. W., & Lalonde, S. (Eds.). (2019). *Breaking the ice curtain. Russia, Canada and Arctic Security in a Changing Circumpolar World*. Calgary: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 Pincus, Rebecca, *China and Russia in the Arctic.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Retrieved from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Pincus_Testimony.pdf. (2019, March 21).
 - Tamnes, R., & Holtmark, S. G. "The geopolitics of the Arctic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Geopolitics and security in the Arctic*" (Londres: Routledge, 2004)
 - Secretary of Defence.
 - DoD. (2019b, June).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ce for Policy.
 - Looking North: Sharpening America's Arctic Focus. Speech given by U.S.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in Rovaniemi, Finland, ahead of the 19th Arctic Council Ministerial Meeting, May 6, 2019. Available at: <https://www.state.gov/looking-north-sharpeningamericas-arctic-focus/>
 - State Council. (2018, January 26). China's Arctic Policy.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ate Department. (2019b, May 6). Looking North: Sharpening America's Arctic Focus. Speech given by U.S. Secretary of State Michael Pompeo in Rovaniemi, Finland, ahead of the 19th Arctic Council Ministerial Meeting.
3. 기타 자료
- "북극, 냉전시대로의 회귀 '산냉전'의 군사-안보 공간으로 확대되나?", 국방일보, 2020년 9월 3일.
 - "산냉전 또는 협력 북극에서 펼쳐질 미·중·러 삼국시대", 「중앙일보」, 2020년 6월 21일.
 - "영국 북극해 방어전략과 북극 안보" KIMA Newsletter 제378호, 2018년 10월 16일.
 - "중국은 옛 미국기지도 노렸다 북극 장악, 뜨거워지는 산 냉전", 「중앙일보」, 2020년 7월 20일.
 - "Arctic security poses icy chess game with Russia, China", The Hill, May. 19. 2017.
 - DoD. (2019a, May).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Office of the